

박정희 시대의 정치와 언어
Political Language of Park
Chung-hee's Mobilization Regime

< 대표저술 >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 언행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6:1. (2008)

『2007 대통령 후보 리더십 청문회』. 부키. 99-145;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전개」. 김영작 편. (2007).

관심분야 : 정치사상, 정치철학, 민족주의, 이론과 실천,

E-mail : dcp@chonbuk.ac.kr

•박동천 (Park, Dong-chun)

•학위취득대학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현직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박정희 시대의 정치와 언어*

<국문요약>

본 논문은 박정희가 언어를 사용한 방식이 그의 권력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나아가 한국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구호들은 조국 근대화, 민족주의, 지도자와 민주주의, 동원의 언어와 위기의식으로 요약되는데, 특히 민족, 민주 등의 단어에 그가 부여한 의미는 매우 독특하게 주관적이어서 통상적인 의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박정희 자신의 내면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난극복이라는 지상과제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단어의 의미나 논리적 모순은 언제든 권력을 통해 억압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장기간의 집권을 통해서 자신이 독점적으로 창출한 언어의 의미를 통상적 의미의 일부로 편입시키기까지 했다. 박정희의 언어는 국난기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난이 극복되는 순간부터 해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진실에 대한 감수성 위축, 정치적 문법의 균열, 위기 프레임 등은 박정희 시대가 남긴 유산으로서, 풍요로운 사회의 문턱에 서있는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주 제 어]

박정희, 정치언어, 진실, 위기 프레임, 동원

I. 서론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 2005-073-BS0010).

김대중이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은 통일을 향한 순수한 충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 나아가 흑시 노벨 평화상을 타보려는 이기적 타산 때문이었을까? 舜 임금이 禹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人心惟危 道心隱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열 여섯자를 당부한 것은 우로 하여금 도심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면 물러나는 마당에 한번 미사여구로 자신의 품위를 과시해보려는 마음에서였을까? 1866년 영국의 수상 존 러셀이 70이 넘는 나이에 선거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인민주권과 정치적 평등을 향한 순수한 열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화룡점정으로 마무리하려는 야심 때문이었을까?

정치인들의 언어가 모종의 공공성이나 고원한 가치를 표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들의 내심에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 현시를 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언어나 행태를 공익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익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의 표현은 될 수 있겠지만, 정치사회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조망하고 그로부터 미래에 관한 어떤 전망을 얻어내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내 맘에 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의 언어 중에서 공공성을 표상하는 측면을 애써 부각하면서 “순수한 의도”였다고 포장해주고, 내 맘에 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적 야심을 과해치면서 “불순한 의도”를 힐난하는 식의 담론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에 몰각한 채 끝없는 패거리 싸움을 벌이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과 그의 행태에 관한 논의가 이처럼 화자의 말초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여, 가장 원시적인 수준의 패거리 다툼에 머무를 때, 그러므로 논쟁에 참여하는 쌍방 사이를 매개할 언어적인 공통 요소가 구성될 수 없을 때, 그 정치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은 설득과 소통보다는 힘겨루기와 강제 및 억압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의 언어는 여느 정치인의 언어보다 이와 같은 힘겨루기식 담론의 주제였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이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졌으니 박정희가 표방한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는 진심이었으며, 나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온건론(백낙청 2005)마저도 배척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김대환 1997, 황대권, 2005, 조석곤, 2005). 물론 반대편에는 정재경(1979), 조갑제(1998), 이인화(1997) 등으로 대변되는 영웅주의 해석이 있다. 박정희를 하늘이 내린 위대한 영도자로 묘사한 이들의 해석에 대한 반발은 다시 진중권(1998)의 조롱과 힐난을 유발하였다.¹⁾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선악 이분법에 입각한 인물평의 시각을 배제한다. 권력이나 지배,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과 명예를 향한 정치인의 개인적인 야심은 모든 정치인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떤 공공성이나 높은 이상을 표방하는 그들의 언어는 개인적인 야심을 숨기고 거창하게 포장하기 위한 수사일 수 있는 만큼이나 적어도 그들의 주관성 안에서는 진정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목표의 표상일 수도 있다. 고상한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바탕을 이루는 시각에서는 예컨대 박정희가 평화통일을 명분 중 하나로 내걸고 유신을 감행했을 때, 집권연장을 위한 수사라는 의미와 그가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원했다는 의미를 대립항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서 평화통일과 집권연장은 완벽하

1) 이 밖에 박정희에 대한 찬반 양론의 포괄적인 목록은 정운재(1995)와 김갑식(2007)을 참조할 것.

게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유신이라는 하나의 초점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통일, 민족중흥, 민주주의 등의 단어들에 대해서 박정희가 부여한 주관적인 의미들이 곧 이러한 단어의 표준적인 의미일 수는 없다. 박정희가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한 의미와 그 단어들을 사용한 방식이 나름대로 내면적 정합성(coherence)과 대현 실적 적합성(adequacy)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다른 방식의 의미나 방식도 가능하다. 그가 원한 “평화통일”이나 “민족중흥”이나 “한국적 민주주의” 등이 과연 얼마나 평화적인 통일이나 민족의 중흥이나 민주주의에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도움이 되었는지에 착안하여 박정희를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다. 여기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박정희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모종의 정답 같은 것을 찾고 그런 정답을 준거로 삼아서 박정희가 내놓은 답을 오답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르다. 오히려 박정희야말로 정치사회의 진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의 정답을 찾고자 하는 선형주의(transcendentalism)의 틀에 입각해서 사유한 인물의 전형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과 다른 의견을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오답으로 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정치사회의 현안들에 관한 결정이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나 보편적인 이치를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실의 정치사회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가치와 소원과 열망의 분포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의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할 것이다.

II. 박정희의 정치적 언어

박정희가 집권기간 동안에 행한 1,541개의 연설문 가운데는 “정치·사회 혼란”, “경제위기”, “북한위협”, “국제사회긴장”, 등, 위기나 혼

란을 주제로 삼은 것이 623개(40%)에 이른다(구경서 2000, 168). 이처럼 박정희는 당대 한국의 현실을 위기 및 혼란으로 인식한 위에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부국강병책을 통해서 민족의 중흥을 기하는 것으로써 권력 장악의 명분을 삼았고 정치사회의 진로를 설정하였다. 그가 자주 사용한 구호로는 “민족중흥”, “조국근대화”,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조, 자립, 협동”, “서정쇄신”, “민족적, 한국적 민주주의”, “지도자, 영도자” 등이 있거니와, 여기서는 이러한 구호들을 조국근대화, 민족중흥, 지도자와 민주주의, 위기와 동원의 언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조국근대화

박정희는 한국사의 과거에 대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회의의장 시절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그는 한민족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의 침체사”로 규정하면서, 특히 당파 싸움을 “세계에서도 드물 만큼 소아병적이고 추잡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조선의 역사란 “두터운 봉건 속에서 빈곤과 나락과 안일주의의 악순환”(박정희 1997, 29-30)이었으며, “사대주의,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과 불로소득 관념, 개척정신 결여, 기업심의 부족, 악성적 이기주의, 명예 관념의 결여”(박정희 1962, 97-105) 등을 우리 민족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근대화란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인바, 여기에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정신 등등,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정재경(1991, 108-109)은 “민주질서”, “민족자본”, “자립경제”, “자주국방”, “부국강병”, “정예국군”, “한국의 위치를 세계 속에 부각”, “정당한 보수가 무시되었던 과거의 고용조건을 개선”, “경제성장”, “고용확대”, “국적 있는 교육”, “선진과학기술의 수용”, “민족문화의 창조발전”,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서 …… 탈피하

여 ……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으로 개조” 등의 문구를 가지고 요약했다.

2. 민족주의

박정희에게 민족주의란 곧 부국강병과 같은 의미였다. 연설문 가운데서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지상과제로 설정하는 사고방식이 표현된 문구 몇 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적 민주주의의 제1차적 목표는 ‘자립’에 있습니다. ‘자립’이야말로 민족 주체성이 세워질 기반이며, 민주주의가 기착 영생활 안주 지인 것입니다.”(「자립에의 의지 방송연설」, 1967년 4월 14일.)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그대로 조국통일운동이요, 전쟁을 막는 일이요, 북한 동포를 구출하여 우리 민족의 평화와 복지를 약속하는 길이다.”(「국군의 날 유시」, 1968년 10월 1일.)

“나를 확대한 것이 즉 우리 국가다 ……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나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연두기자회견」, 1970년 1월 9일.)

“민족과 국가라는 것은, 이것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안태와 번영을 위해서는 그 민족의 후견인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까. 국가는 민족의 후견인입니다. 국가 없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연두기자회견」, 1973년 1월 12일.)

박정희의 문법에서 민족이란 곧 국가와 동의어이다.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민족의 도덕적 정체성과 같은 관념은 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민족의 정체성이란 일단 생존하고 난 다음에 생성되어야 할

종류의 사항이다.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 사이의 관계를 그가 이처럼 생존지상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의 마키아벨리주의적 편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다음 절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수차례에 걸친 이른바 “변절”의 굴곡들이 외부의 시각에서는 변절이었지만 박정희 개인의 주관성 안에서는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에 해당했던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할 때, 일본과의 협상 역시 반드시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까닭은 없게 되는 것이다.

3. 지도자와 민주주의

지도자와 절차적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지도자도」에 잘 나타난다. “민주 사상이 발달된 현대에 와서 지도자는 피지도자와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가진 평등한 지위에서 일보 앞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걷는 동지이다. 즉 피지도자를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피지도자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자이다.” 그러나 지도자와 피지도자는 의지의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열관계에 있다. “건강하고 동등권을 가진 두 사람 중 갑은 을의 의식주를 무제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이 병이 들어 갑(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와 환자란 조건하에 갑은 을의 식사 제한 및 조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집을 떠나 병원에 입원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박정희는 ① 동지의식, ② 판단과 해결의 능력, ③ 선견지명, ④ 원칙에 대한 충실, ⑤ 용단, ⑥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⑦ 목표에 대한 확신, ⑧ 지도자단의 단결, ⑨ 성의와 정열, ⑩ 신뢰감 등을 든다. 그러나 여기서 동지의식이란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가지는 종류의 동지의식이며, “원칙에 대한 충실”은 “자기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정직하며 찬양을 받든 비난을 받든 오직 정의와 양심의 판단에만 복종하는” 형태의 충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향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나가는 데 흔들리지 않는 종류의 충실을 가리킨다. 지도자의 판단과 선견지명이 진행하려는 경로를 어떤 절차적 요건들이 방해하거나 지연한다는 것은 박정희의 지도자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집권기 내내 한국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위기의식이 여기에 겹치게 되면, 피지도자의 이익을 지도자가 헤아려서 피지도자의 “경험적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수단을 써서라도 베풀어주는 용단도 박정희가 이해하기로는 민주주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관용, 절차적 정의, 정부권력에 대한 반대의 권리를 본질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조직원리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동원의 언어와 위기의식

박정희는 자기가 설정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역량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빈곤의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로 깃들인 나태, 안일, 사행행위 및 의타심 등 침체된 악습을 구축하고 건곤일척 새 생활 건설을 위한 근면, 성실한 자립적 분기가 없다면, 정부의 여하한 원조나 노력도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²⁾이라고 보았다. 나태와 안일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으로 인민을 개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동원의 기제들이 활용되었는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인민의 뇌리에 각인하는 데 더하여, 충효 사상을 각급학교와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순신이라는지화랑과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현창하며, 국민윤리 교육을 통해서

2) 「농민의 분발을 촉구하는 담화」, 1962년 3월 10일.

진취적이고 자주적이며 합리적인 근대인의 모형을 제시하고,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해서 아동들로 하여금 암송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동원 메커니즘이 절정에 도달한 것은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자조(自助, self-help)의 원리에 따라서 더 잘하는 마을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참여의 열성도와 실적 차이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였다, 동시에 모든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새마을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동시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교육했다. 1972-1979년 사이에 각종 합숙 교육을 받은 사람이 67만 7900명, 비합숙 교육 인원은 무려 6,953만 3,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에서 행한 영농지도자교육과 겨울철 새마을 영농기술교육 및 기타 각종 교육을 합하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전 국민이 “일인당 평균 2회 정도의 비합숙 훈련을 받은 셈이 된다” (전인권 2006, 299).

이와 같은 동원의 바탕에는 상시적 위기의식도 자리 잡고 있었다. 박정희는 “지금이 고비”, “앞으로 3년”, “지금부터 5년”이라는 식의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매 시기를 비상시기로 인식하는 동시에 위기를 곧 기회로 보아 국난극복의 결정적인 고비가 도래했다고 인민의 참여를 고취했던 것이다. 1962년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는 “반만년 만에 처음 만난 신민족국가 창건을 위한 천재의 호기”를 만나서 “5·16을 기점으로 한 지금의 본인은 조국과 민족과 역사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고 (박정희 1997, 31-32), 1971년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만 더 피땀 흘려 노력을 하면 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공산당의 위협도 막을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차고 보람된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보자”고 했으며 (박정희 1973c, 1108), 1976년 8·15 경축사에서는 “나는 앞으로 4,5년이 우리가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터전을 굳게 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박정희 1979, 7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호소인 셈인데, 흥미로운 것은 18년 동안의 집권기 내내 위기를 상시화하고 “앞으로 몇년만 더”를 외쳤다는 사실이다.

Ⅲ. 박정희식 문법의 주관적 의미와 대현실적합성

박정희는 “조국근대화”, “자립경제”, “자주국방”, “총화단결” 등과 같은 구호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민족복지”, “교육입국”, “사회정의” 등의 구호도 외쳤다. 그럼에도 그의 시대를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로매진한 시기라고 자리매김할 사람은 많아도, “민주주의”나 “복지”가 실현된 시기라고 볼 사람은 - 이 단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재정의하지 않는 한 - 별로 없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박정희 시대는 일류대학의 좁은 문을 입신양명의 관건으로 삼는 입시경쟁이 본격화한 시대로서 인문학적 탐구정신이 퇴화하고 학문연마를 출세의 방편으로만 간주하는 시각이 널리 확산된 시기였고, 정의와 관련해서도 법치의 원리에 입각한 절차적 정의보다는 최고권력자의 통찰력에 의존해서 정의 여부가 좌우되는 인치의 시기였다. 더군다나 민족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에 분포하는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 노선 중에는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나 대일 국교정상화를 민족주의에 역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더 많을 것이다. 박정희가 사용한 구호와 그의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이처럼 외부에는 많은데, 박정희 자신은 구호와 실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박정희는 인식론적으로 선험주의자였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의자였다. 즉 국가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국가가 사회 전체를 위해 목

표를 설정하고 사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또는 사회에게는 나름대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올바르게 포착하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지도자의 조건에 포함시킨 “선견지명”이자 “판단능력”에 해당한다. 더구나 여기에 상시화된 위기 의식과 어릴 적부터 체득해 온 병영식 서열구조의 모형이 병합되어, 박정희의 마음 속에는 엘리트가 설정한 국가목표를 향해서 전국민이 기립하여 사열식을 벌이는 형태의 일사불란한 총동원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말은 민족적으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생존과 성장은 민족의 지상과제일 뿐만 아니라 인민에게도 지상과제라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그의 주관성 안에서는 구호와 실천 사이에 괴리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다. 우선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진재호(2000, 21)는 과감하게 “일본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박정희”라고 말하지만 만주 시절 박정희의 행적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단언하기에 곤란한 불투명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³⁾ 그렇지만 문경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혈서를 보내는 열의를 보여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든지, 만주군관학교 및 그 후에 편입하는 일본육사에서 학습한 일본 군국주의 병영사회의 구조를 일생동안 사회조직의 모범으로 간주하였다는 점, 그리고 해방 후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일보다 반공을 우선시하다가, 일시적으로 “평화통일의 원칙”을 남북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천명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조

3) 박정희가 만주에서 팔로군을 토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군 특설부대의 일원이었다는 주목할 만한 증언도 있다 (류연산 2004; 리광인 2005). 그러나 그런 증언만으로 박정희의 만주 행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 결국에는 남북한 독재의 공고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만 사례 등을 보면, 박정희는 민족에 역행했거나 또는 적어도 그의 민족주의가 순수하지만은 않았다고 판정해야 할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상범 2006; 정태헌 2002). 그래서 서중석(1995)은 “박정희 정권은 …… 얼핏 민족주의적인 면도 보여 주었고 …… 민족적 자존심을 높였으며 …… ‘주체성’ 있는 교육 등 ‘민족주의’의 강조는 …… 일정하게 교육적 효과를 지니게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반통일 세력으로 …… 민족주의와 대립적인 ‘국가주의’의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판정한다.

반면에 김일영(2006)은 한국에 존재해 온 민족주의를 방어적 근대화 민족주의, 통일지향적 민족주의, 민족경제지향적 민족주의, 반미 민족주의 등 네 갈래로 분별하고,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방어적 근대화 민족주의였다고 자리매김한다. 반외세, 탈종속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지만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치적 민주화와 민족국가의 완성에도 어느 정도로는 관심이 기울여진 집체주의 체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지향 세력이나 민족경제지향 세력이나 반미 세력이나 각자 나름의 민족주의를 표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민족주의 모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박정희를 반민족으로 재단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한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김일영의 입장이 우세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상범이나 서중석이 생각하는 민족주의란 일제 시에는 일제에 대한 저항을 뜻했고, 분단 이후에는 분단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등, 저항하는 가치가 적극적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자신들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현제를 부정하는 형태로 매우 어렵פות게만 표상되었다. 민족주의가 하나의 가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일수록 그 하나의 가치를 명확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못마땅함이라고 하는 충분히 치밀하지는 못한 정서의

주도를 방치하고 만 셈이다. 못마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단지 “못마땅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동기만으로 구성된 민족주의로는 지극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극복을 위한 “민족적” 추진력이 응집되려면 “가까운 자에 대한 사랑”이 “멀리 있는 자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되고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콘(Kohn 1988, 34-45)이 영국과 프랑스와 관련하여 부각하듯 자유라든지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민족 이외의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원리에 의한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⁴⁾

단 김일영의 경우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가치지향성이 철저하게 박정희 개인 (또는 그 주변의 극소수 집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설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가령 박정희 또는 박정희가 추구한 가치가 민족의 가치를 어떻게 대표하느냐는 질문을 상정해보면, 이는 이치로 따져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실제 역사의 경로에서 현실을 추동한 힘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쨌거나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 한국(대한민국)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형화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형태의 정체를 확립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박정희와 같이 역사를 상당 기간 동안 주도하고, 그리하여 정형화되지 못한 상태의 정치사회에 일정한 정도로 틀을 부여한 입장에서는 가치지향의 내용이 무엇이든 자신의 노선을 “민족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만다. 민족주의에 앞서서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 자체가 - 박정희가 주도한 이른바 민족(nation)⁵⁾ 형성의 과정 안에서 - 그의 행보

4) “가까운 자에 대한 사랑”과 “멀리 있는 자에 대한 사랑”은 니체의 표현이다. 콘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은 박동천(2006, 448-456)을 참조할 것.

5) 고원(2006), 황병주(2004, 2005), 정태현(2002), 김호기(1998) 등은 박정희 시대가 민주주의나 민족주의의 측면에서는 근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산업화, 부국강병, 자본주의, 감시체제, 국가에 의한 제도적 폭력수단 등과 같은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근대를 맞이한 시기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에 따라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선을 형용하려는 듯이 민족을 말하지만 실상은 민족이 무엇인지가 자신의 노선에 의해서 규정되는 셈이다.

서중석⁶⁾이 말하는 민족은 박정희의 행위 바깥에서 규정되어 그의 행위에 관한 잘잘못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작용한다. 반면에 김일영이 말하는 민족은 박정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중석⁶⁾이 말하려는 민족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잣대를 정했는지를 따져 물을 수 있다. 반면에 김일영이 말하려는 것처럼 구성주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민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잘잘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박정희가 구성한 민족의 개념에 따라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⁶⁾ 더구나 우리 일상어의 용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부지불식간에 찬양의 의미가 살짝 섞이는 바, 민족을 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그와 같은 일상 용례와는 상반되는 인식임을 김일영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석의 미흡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민족형성”의 한 주체였다는 말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무엇이든 **형성**한 공로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민족**을 형성했다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를 주도한 그의 권력 안에는 민족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권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독점은 곧 언어의 독점이었기 때문에, 그의 “민족주의”를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그가 권력을 독점한 실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국민형성이라고 부르지만,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자처한 어법에 따르면 그 시대에 형성된 “국민”(nation)이란 곧 “민족”(nation)이 형성되었다는 말과 같다.

6) 정윤재(1995, 269 각주)는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자이준거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뒤집어보면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권력이 민족이나 민주주의 의미를 규정한 사례라는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의 독점은 마키아벨리주의적 국가주의⁷⁾에 바탕을 둔 박정희식 권력정치에서 파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줄곧 말하면서도 또한 “행정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따위로 형용사를 첨가해서 구실과 변명을 시도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를 첨가한 표현으로써 그가 뜻한 바는 기본적으로 레닌식 민주집중제와 흡사한 형태의 의사결정구조였다. 정치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진로가 있다고 보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의지라고 보면, 민주주의란 그와 같은 인민의 “진정한” 의지를 찾아서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벌린 식 표현으로 말하면, 충분히 개명되지 못해서 “저열한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경험적”인 의지들은 단지 무시되어야 할 가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요소들을 핵심적인 소재로 삼아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차주의적 원리는 박정희와 같은 선형주의자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것이었다.⁸⁾

그러면서도 박정희는 자신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곧 전체주의와 통한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듯, 전체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언표 수준에서 적대시했다. 민족주의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박정희가 사용하는 어휘는 자신의

7) 국익, 또는 국가이성(ragione di stato)을 위해 잔혹한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발상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8) 이를 두고 전인권(2006, 14-15)은 “성장과정과 생애에서 단 1년도 민주주의를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판정했다. 사실 김재준이나 장준하, 문익환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주의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드물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정치사회의 진로에 관한 선형주의적 시각이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경로에 관해서는 벌린(Berlin 2006b)을, 한국사회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선형주의에 젖어있는지에 관해서는 박동천(2007; 2008)을 참조할 것.

행태와 신조를 담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말고는 내용과 용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특별히 고유하거나 필연적인 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의 표면과 내용 사이에 타당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그 자신이 경원하고 위협시했던 것이다,

그가 특별히 자의적으로 사용한 중요한 단어로는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일군의 어휘들도 있다. 그는 “앞으로 5년”, “앞으로 3년”, “획기적인 시대”, “위기의 시대” 등, 현재를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인식하는 언표를 18년 내내 즐겨 사용했다 (황인정 1985, 42-43). 그는 “과업 성취 후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겠다”던 혁명공약을 반복할 때부터 유신이라는 궁정쿠데타를 감행할 때까지 “이번 한 번만” 자신이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그런 말들을 반드시 거짓말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 번만”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되었지만, 집권을 시도할 당시에는 매번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이번 한 번만 하고 물러나자”는 다짐을 실제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가 위기 상황이고 그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만 하면 국운 상승의 획기적인 계기가 도래한다는 인식은 지난번에 “한 번만”이라고 했던 다짐을 다시 “이번 한 번만 더”로 반복할 수 있는 편리하고 영원한 구실이 된다. 그리하여 18년 내내 “비상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결과가 빚어졌는데도 그는 자신의 언행이 모순임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나라가 계속 위기임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 민족주의, 민주주의, 위기의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듯이 박정희의 어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목일수록 언표와 내용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이런 결과는 언어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특별한 의도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의 진로와 관련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정답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그것이 민족이고 민주이며 정의라는 정치의식에서 비롯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족, 민주, 위기 등의 단어를 그가 사용한 방식은 통상적인 용례와 어떻게 일관성이 유지될지 따져 물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민족이나 민주나 위기의 의미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나 타당성을 가지는 종류였을 뿐, 이견을 가진 사람에게 이치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은 가지지 못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어휘나마 반대자들을 힘으로 억압할 수 있기에는 충분할 만큼 다수 국민을 동원하는 도구로서 봉사하였고, 그만큼 현실세계를 주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자아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IV. 유 산

언어를 단순히 사물의 이름을 표기하는 기호라고만 생각하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르더라도 다소간의 불편만을 감수하면 불가능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일인 것 같다. 물론 진(秦)나라 환관 조고(趙高)의 시도는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외에 공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적으로도 어떤 이익을 자아내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에 프랑스나 중국의 혁명기나 국난기의 한국에서처럼, 일부 엘리트가 제정한 표준어에 의해서 인민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투리를 강제로 축출한 것과 같은 경우들은 민족형성을 위한 동원 정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적어도 어느 정도로는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 특히 독재자의 언어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관심은 으레 권력에 의한 자의적 언어사용이 어떤 사적 또는 공적 이익으로 연결되었느냐는 논의로 이어지기가 쉽다. 즉 어느 정도의 공적

이익으로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자의적 언어 사용의 정당화 여부를 판가름하려는 논의이다. 실제로 박정희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 맴돌고 있다. 조갑제, 정재경, 이인화, 김일영 등은 일부 희생이나 억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제성장을 통한 민족중흥이라는 박정희의 업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거리들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김대환(1997), 전제호(2000), 조석곤(2005), 한상범(2006), 황대권(2005) 등은 박정희의 업적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정권 연장이라는 사적 이익에 불과하였단지, 또는 그 시대에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박정희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는 이유로 그 시대의 억압과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현실 정치의 세력다툼과 너무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이치에 입각한 토론이 진행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인권(2006)처럼 박정희의 자의적 언어사용이 그의 성장배경이나 그 때 형성된 심리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식의 해명은 일종의 심리주의적 환원론으로서, 박정희 시대가 대한민국에게 남겨놓은 유산을 비롯한 사회적 차원의 의미에는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 논의는 그 시대, 특히 그의 자의적 언어사용이 한국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1. 진실에 대한 감수성 위축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할 점은 박정희 식의 언어사용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 진실에 대한 감수성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축되었다는 사실이다. 김구 암살, 장준하의 죽음, 5·18의 사전 기획 여부 등,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또는 사고 가운데 진상이 명쾌하게 규명된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정치적으로 심각한 무게를 지니는 사건의 경우 진상이 밝혀진다면 특정 정치세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현상(status quo)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 예컨대 미국에서 케네디 암살이나 레이건 정부의 니카라과 콘트라 지원과 관련된 의혹처럼 - 모든 진상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필자가 부각하고 싶은 측면은 사건에 따라서 진상이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 자체의 진상을 파고들어 가 드러내려는 관심이 충분히 이어져서 어떤 결실이 나타나기도 전에 적당한 단계에서 얼버무림으로써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에 앞서 이른바 “지휘책임”, 또는 “몰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위직 공직자 한 두 사람을 퇴진하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경향도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나쁜 결과가 초래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말투를 트집 잡아서 결국 탄핵소추로까지 몰고 간 사고방식 역시 같은 부류이다.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원한다는 것은 박정희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염원했던 것만큼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것은 노무현이나 박정희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당연하다. 그런 것을 두고 단지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바란다”, 또는 “열린우리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언어감각은 권력의 바탕 위에서 언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박정희의 경우와 닮은꼴이다. 9)

9) 박정희(「선거종료에 즈음한 치사」, 1963. 12. 2)는 자신의 남로당 전력을 들어 “상대방을 공산주의자로까지” 몰아친 윤보선 진영이 “악랄하고 추잡했지

왜냐하면 노무현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 그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그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은 애당초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 아무리 중립성을 표방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심판기관의 판정은 언제나 한 쪽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다른 쪽 편을 패자로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때문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선거중립 의무 조항을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어떤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특정 정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공권력을 선거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결정적인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권력의 동원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와 준수한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일관적인 차별이 가능해진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발언과 행위는 언제나 정파적인 반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발언의 중립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발언이나 행위가 중립의무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10) 그 모든 행위들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중에서 일부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공권력의 동원 여부를 잣대로 삼지 않고 단순히 발언의 중립성 여부만을 잣대로 삼게 되면 이때 선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 자신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963년부터 그의 선거협오증이 시작되어 결국 종신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필자가 보기에는 더욱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동 이념으로 하는 이 나라의 사상적 풍토에서 상대방을 공산주의자로까지 몰아치는 악랄한 수법”은 박정희 시대에 정적을 숙청할 때 동원된 전가의 보도였다.

10)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방문과 관련된 중립의무 위반 논란처럼 비생산적인 말다툼이 발생하는 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더욱 주목할 지점은 노무현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논쟁을 지켜보는 지식인 관객들 사이에서 선관위의 자의적인 의미해석을 문제 삼기보다는 노무현의 말투가 잘못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라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이런 행위에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겨레』, 2007. 6. 8.)고 한 김수진의 언표가 전형적이다. 선관위의 결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 대통령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제도적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하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노 대통령의 언행에서 김수진이 찾아낸 문제란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김수진 나름의 도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의 문제가 반드시 동일한 차원에서 서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진처럼 그 두 차원의 문제를 종합해서 평결을 내리는 사고방식 안에는 후자의 차원 즉 각 개인의 도덕적 가치 표명이라는 차원과 전자의 차원 즉, 언어의 논리적 적용, 다시 말해서 진실의 차원을 두루뭉수리로 뒤섞어 취급하면서, 진실보다 도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11)

2. 정치적 문법의 균열

언어생활에서 진실에 관한 관심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도덕이 전면으로 부각된다는 것은 정치적 진영의 분열에 상응하여 정치적 문법도 분열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도덕이란 본질적으로 주관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를 자아내는 기반이 되지만 상이한 가치지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배

11)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도덕은 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로 전락하게 된다 (박동천 1999).

척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떤 사회든 여러 갈래의 가치지향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다양성 사이에서 질서는 결국 물리력에 의해서 강요될 수밖에 없다. 한편 도덕적 주관성의 다양성 사이를 관통할 수 있는 사회연대, 다시 말해서 권력에 의해 강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연대의 기반은 오직 각종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린지를 가늠하는 감수성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공유되는지에 달려 있다 (박동천 2000).

권력자의 주관 안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의 주관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의미의 응집력이 흐트러지고 마는 문법이 박정희 시대에 경제제일주의라는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대중적인 토대를 둔 동원의 권력에 의해서 상황을 주도한 결과, 그 뒤를 계승한 전두환 시대에는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며칠 동안 백주에 벌어진 사태의 진상마저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부 세력과 거기에 순응한 일부 신문사들이 여러 해 동안 조직적으로 호도할 수 있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그것이 은폐이자 호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7년의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물론 한국 사회에 진실을 향한 감수성이 완전히 숨을 죽인 것은 아니며, 진실을 매개로 한 사회연대가 실제 현실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적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1987년의 전환은 한국 사회 정치 동력의 가장 밑바탕에 진실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 후로 정치적 담론이 정파적으로 분열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이나 남북정상회담 및 노벨평화상 수상마저도 정치공동체 전체를 위한 성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는 한 쪽 시각의 곁에서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는 음모론적 - 그 자체가 정략적인 - 해석이 완강하게 뿌리를 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담론의 분열 자체는 불행한 일이 아니다. 다양한 가치

와 해석이 분출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담론의 분열은 병리 현상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정치의 본령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더구나 정치인들의 공개적 언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일인지를 깨달은 바탕 위에 성립한 것이 근대의 민주주의이고 보면, 정치적 주장의 숨은 의도나 배경을 캐물어 밝히는 방향의 관심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에 숨어있는 의도를 밝히려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후견공정의 오류가 아주 쉽사리 저질러지는 공간이다.

후견공정의 오류란 명제 “p이면 q이다”와 “q”가 참이라는 데서 곧바로 “p”도 참임을 추론하는 오류를 가리킨다. q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p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q를 일으킬 수 있는 전제로서는 p 이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 $p \rightarrow q \vee q$ ”로부터 곧바로 “p”를 결론짓는 것은 오류가 된다. 이는 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사항으로 양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정치담론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에 기초한 주장들이 매우 자주 개진되고, 때로는 아무도 감히 그 오류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회의 정치의식을 휘어 잡아버리는 경우마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¹²⁾ 위에 거론한 김대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자. 한국의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노벨평화상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결론을 이로부터 도출하면 바로 후견공정의 오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이 나오려면 “다른 이

유는 없이 오직 노벨상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어떤 동기보다도 노벨상을 받으려는 동기가 특별히 강하게 작용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사실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공격하려는 의도에 밀려서 이와 같은 세밀한 이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환경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종교단체, 그밖에 각종 시민단체들에 의한 단일주제 정치(single interest politics)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 개개인들도 어떤 정책이나 사법부의 결정이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는 순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의 음모론적 해석에 쉽사리 빠지고 만다. 반면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사필귀정”을 외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가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 공통분모로서 원칙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 권력이나 부에 의한 농간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심성을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 외치는 “사필귀정”에서 “정”이란 곧 자기가 승자의 편에 속해있다는 득의의 환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경쟁의 와중에서 자파의 의도는 공공적이고 상대방의 의도는 사리사욕이라고 주장하는 전술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독립적인 지평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떠내려 가버리게 되면 조선 후기의 당파싸움과 다르지 않은 운명을 만나게 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담론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박정희에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사태는 박정희의 권력에 기댄 언어 사용이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사회의 전통이나 일제의 억압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박정희에게 반대해서 탄압받았던 진영의 복수심이나 원한에

12) 개명되지 못한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미국처럼 비교적 개명된 사회에서도 2001년 9월의 테러 이후에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Wolin 2003).

기인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¹³⁾ 다만 박정희의 어법이 이치보다 권력을 우선시켰고 아울러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는 항상 대통령이 있다는 밑그림을 한국의 정치의식에 제공했기 때문에, 그의 시대 18년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담론의 분열구조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에 의한 의도적 결정이라는 틀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감수성 자체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것이다.

3. 위기 프레임

농구 경기에서 20초 타임아웃 중에 전술을 결정하기 위해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 토론을 벌일 수는 없다. 인간 사회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의 성격은 필요한 결정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속임수는 상대에게 해를 입히므로 비도덕적이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므로 반사회적이지만, 전쟁터에서는 영웅의 지혜가 된다. 이처럼 평시를 전제로 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논의라도 위기라는 요소가 하나 첨가되면 완전히 그 의미가 뒤집힐 수 있다. 위기 상황의 담론에서는 어떤 주장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데에 평시 상황의 담론에 비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지는데, 첫째는 공통의 목표에 - 대개의 경우는 생존 - 관해 의견일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의나 정당성의 기준이 아예 적용

13) 박정희 시대의 비관적 지식인들이 주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점에서만 일치를 보였을 뿐 내면에서는 잡다하게 균열되어 있었고, 대체로 선협주의에 입각한 엘리트주의자들이었다는 점은 강수택(2001)의 조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협주의와 복수심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벌린 2006b, 박동천 2007 참조). 예컨대 박세길(1993), 진중권(1998), 한상범(2006) 등의 연표에서 복수심을 읽는 사람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매우 느슨해진다는 점이다 (Hume 1975, sec. III, part I, 참조).

목표에 관해 의견일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어의 적실성(relevance) 여부에 관한 분별도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다. 아울러 스스로 처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발상은 인간적 품격, 자비, 예의, 평화, 선행, 정의, 절차 등등, 각박함이나 악착스러움과는 본질적으로 대척될 수밖에 없는 가치들을 일종의 사치로 치부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절망적인 민생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수출제일주의’라는 것을 깨달은 온 국민은, 땀땀 힘을 뭉쳐 수출에 매진했다”는 오원철(2006,98)의 묘사가 당시의 정황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목표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명령(오원철 2006, 98)에 따라 추구할 때, 예의, 인권, 환경, 장기적 결과, 등등, 당면한 목표 달성으로 직결되지 않는 모든 고려들은 부질없는(irrelevant) 논의로 치부된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때때로 현실의 절박함을 망각하는데서 지나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위기의식 덕분에 “언어가 휴가 가는”(Wittgenstein 1967, I, §38) 일이 예방된다는 사실에는 언어를 통해 가치를 표상하려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항상 유의해야 할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적실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해석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한말 이후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위기의 역사를 실제로 겪은 데다가, 박정희의 위기어법이 겹치면서 위기 상황이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기성세대의 의식 안에 정파와 상관없이 내장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나 언론브리핑룸 설치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지작업과 여론조성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노무현 정

부의 시도에서도 일종의 위기의식에 따른 성급함이 일어난다. 이번 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목표에만 시선이 집중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는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은 것이다. 새만금간척, 경부고속철도, 한미 FTA와 같은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서 폭력사태, 장기 단식, 또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자아표현방식이 등장하는 것도 위기의식 및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때문이다.

박정희 자신은 그 시대 한국사회의 물리적 상황이 여타 모든 고려를 포기하고 오직 수출 증대에만 매진해야 했을 정도로 위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나 표현의 자유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사치로 치부되는 것이 마땅했을 정도로 실제로 당시의 한국 사회가 위기였는지가 엄연히 하나의 질문으로서 성립한다는 사실은 당대 이후 실제 역사가 증명한다. 하물며 경제성장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쓴 결과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 1990년대 이후를 생각해 보면, 총체적인 위기의식에서는 벗어나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의 의식 안에는 여전히 위기가 매우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상상력의 발동을 제약하는 차꼬로 작용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여지를 발굴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이 20,000달러를 넘어섰고, 자기 임기 중에 40,000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 대다수는 생계의 고민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이다. 물리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의 덫에 아직 갇혀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전적으로 박정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집권기 18년을 거치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V. 결 론

박정희의 집권기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인민을 동원하고, 동원된 인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 권력이 행사된 시기였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 “민족주의”, “민주주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등의 표어를 사용해서 국정목표를 홍보하고 인민을 동원하며 독재를 정당화했다. 인민을 동원하는 데에 것처럼 성공한 사례는 한국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다. 그만큼 화려한 수사들이 활용되었는데, 박정희가 사용한 어법은 용어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은 권력의 그림자를 통해 덮어버렸다는 전형적으로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박정희의 주관적인 언어 체계에서 자신의 체제는 항상 민족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형상과 겹쳐서 나타났다.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박정희 체제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체제를 전형적인 반민족이자 반민주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언어를 단지 위선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한다. 그러나 일체의 정파적 입장에서 독립하여 순수한 이치에만 입각해서 살펴보면 이 문제를 이처럼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다.

민족이나 민주나 모두 인민이라는 집단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그림에 의존해서 생겨난 개념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수천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한국의 인구 사이에 정치적 가치나 의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나 가치를 추구해야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민족의 개념에 관한 표준적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 그것을 준거로 삼아 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답될 수는 없는 노

뜻이다. 왜냐하면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체에 특별히 무거운 정치적 비중이 실리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내용은 차치하고 누가 “민족”이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느냐는 문제 자체가 이미 정치적 경합의 핵심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시 박정희의 의미규정은 레닌식 민주집중제와 비슷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상치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특히 개인의 권리와 개명된 이기주의를 본령으로 삼는 앵글로-색슨식 체제만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탈몬(Talmon 1952)은 루소식 일반의지를 중심축으로 삼는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비판했지만, 때로는 영미 사회에서조차(일례로, Laski 1940) 이익정치의 폐해가 두드러질 때에는 정치적 쟁점에 관해 선협적인 정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종종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향은 상황을 위기로 인식할수록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박정희 체제의 사회조직 원리와 실제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 더욱 가깝다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한 특정 형태에게 표준의 지위를 자의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민족이나 민주라는 단어에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시켜서 박정희 체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 작업은 본고의 의도 바깥에 놓인다. 대신에 필자는 박정희가 제창한 민족이나 민주, 근대화, 위기 등의 구호와 담론들이 각각 그의 문법 내부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울러 그의 권력과 어떤 관계인지를 논의했다. 그리하여 그가 사용한 어휘들은 그가 주관적으로 정의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주관적 정의는 그의 권력에 의해 뒷받침을 받는 순환구조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순환구조를 통해서 민족 및 민주라는 한국어 단어의 의미에 추가 요소가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나아가 그의 언어 독점은 그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이는 진실에 대한 감수성의 위축, 정치적 문법의 균열, 그리고 위기 프레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들을 해소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는 데에는 한국 사회가 현재 다원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다원화의 과정은 불가피하므로, 다원적인 사회에 알맞은 정치체의 작동을 위해서는 진실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로 기능해야 하며, 이익의 충돌을 개명된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치의식의 공통분모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하고, 불안감에 찌들기보다는 다소 여유롭고 침착한 인식의 지평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규범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존을 지상과제로 파악한 박정희의 정치의식은 국난기에 적실성을 가지는 요소들이 융합된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의식을 통해 인민을 동원하고, 다시 그룹으로써 인민에게 그러한 정치의식을 주입하는 데에 성공한 것은 그의 공로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덕분에 바로 그와 같은 정치의식 자체의 해체가 정치사회 전체의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역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수택. 2001,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식인론 연구」. 『사회와 역사』, 59집, 111-144.

고원. 2006,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 사회』, 봄, 69호. 178-201.

구경서. 2000, 「박정희 정치연설의 정치커뮤니케이션적 의미 분석」. 건국대학교, 『政正』. 제13집, 157-185.

김갑식. 2007, 「박정희 시대 연구경향과 재조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16:1, 81-110.

김대환. 1997,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재검토」.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3:1, 21-39.

김일영. 2006, 「박정희 시대와 민족주의의 네 얼굴」. 김영작 편, 『한국 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 백산서당. 335-367.

김호기. 1998, 「박정희시대와 근대성의 명암」. 『창작과 비평』, 봄, 99호. 93-111.

류연산. 2004,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 아이필드.

리광인. 2005, 「‘특설부대원 박정희’는 연변학계의 정설」. 『말』, 12월호. 235호. 88-93.

박동천. 2008,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 언행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6:1. 114-144.

_____. 2007, 「노회찬의 리더십: 실용적 변혁운동가의 리더십」. 호남정치학회 편, 『2007 대통령 후보 리더십 청문회』. 부키. 99-145.

_____. 2006,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전개」. 김영작 편, 『한국 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 백산서당. 437-468.

_____. 2000,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정치사상연구』 3집.

67-94.

_____. 1999, 「위선의 문화: 진실 규명의 정치철학적 의미」. 김인영 외,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 진단과 처방』. 소화. 9-51.

박세길. 1993, 「인간 박정희, 변절과 권력욕의 화신」. 『역사비평』 23호, 여름, 157-167.

박정희. 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 - 사회재건의 이념』. 동아출판사.

_____.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_____. 1973a,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1: 군정편』. 대통령비서실.

_____. 1973b,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2: 제5대편』. 대통령비서실.

_____. 1973c,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 제6대편』. 대통령비서실.

_____. 1973d,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4: 제7대편』. 대통령비서실.

_____. 1976,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5(상): 제8대편』. 대통령비서실.

_____. 1979,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5(하): 제8대편』. 대통령비서실.

_____. 1997,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_____. 1961, 「指導者道」. 『조선일보』, (1) 6. 28, (2) 6. 29, (3) 7.1.

백낙청. 2005,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창작과 비평』. 여름. 128호, 287-297.

서중석. 1995, 「박정권의 대일 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봄 호. 28호.

오원철. 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이인화. 1997, 「『인간의 길』에 나타난 근대성 문제」. 『상상』. 가을. 259-286.

전인권. 2006, 『박정희 평전』. 이학사.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정운재. 1995, 「제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쉽: 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1:1, 239-272.

정재경. 1979, 『한민족 중흥사상: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철학』. 신라문화사.

_____. 1991, 『박정희사상서설 - 휘호를 중심으로』. 집문당.

정태현. 2002, 「민주적 민족적 국민 형성의 장정에서 본 박정희 시대」, 『역사문제연구』 9호, 11-40.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조선일보사.

조석근. 2005, 「박정희신화와 박정희체제」. 『창작과 비평』. 여름. 128호, 272-286.

진중권. 1998,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개마고원.

한상범. 2006,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들』. 삼인.

황대권. 2005, 「지금도 계속되는 박정희 패러다임」. 『창작과 비평』. 여름. 128호, 257-271.

황병주. 2004,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임지현, 김용우 편,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_____. 2005,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15호, 129-175.

황인정. 1985, 『행정과 경제개발: 한국발전정부론』 (증보판). 서울대학교출판부.

Isaiah Berlin. 2006a, 「자유의 두 개념」. 박동천 역,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Two Concepts of Liberty", *Liberty*)

_____. 2006b, 「역사적 불가피성」. 박동천 역,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Historical Inevitability", *Liberty*)

David Hume. 1975,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by L. A. Selby-Bigge. Oxford University Press.

Hans Kohn. 1988, 박순식 역,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Introduction: The Nature of Nationalism", *The Idea of Nationalism*)

Harold Laski. 1940, *The American Presidency: An Interpreta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Jacob L. Talmon. 1985, *The Origins of Totalitarian Democrac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Ludwig Wittgenstein. 1967,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 by G. E. M. Anscomb. Oxford: Basil Blackwell.

Sheldon Wolin. 2003, "Inverted Totalitarianism", *The Nation*. May 19.

Political Language of Park Chung-hee's Mobilization Regime

Park, Doung-chun

(Jeon Bu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role Park Chung-hee's political language played in his exercising of power. His political language can be represented by slogans that were used to mobilize people through appeals to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nationalism, "democracy" under strong leadership, and national crisis. But what he meant by nationalism and democracy was so idiosyncratic in view of the meanings of the terms that were in general use among the Korean people that many opponents found his use of language hypocritical. Yet in his own cognitive structure, the correct meaning of words or logical consistency was matters that could be repressed with power as long as economic development to overcome national crisis was to be achieved in the meantime. Moreover, the meanings in

which he used terms such as nation and democracy came by frequent usages to be incorporated among the diverse elements that would constitute the terms' legitimate meaning in general. As Park's language was justified as a means of overcoming national crisis, so was it to be dissolved after the crisis is over. Korean society inherited the contraction of truth-sensitivity, the grammatical cleavage of political language, and the crisis-driven frame of reference from Park's political language and these aspects of political language have to be dealt with from now on.

Keywords: Park Chung-hee, Political Language,
Truth, Crisis Frame, Mobilization